

경미한 학교폭력 학폭위 안 간다

정책속려 결과 정책참여단은 찬성·설문조사는 반대 우세

학폭위 교육지원청에 이관...법률가 배치 등 전문성 강화

앞으로 학교 내에서 교육적 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넘기지 않고 학교가 자체 해결한다. 대신 학폭위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설치해 심각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선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해 학부모와 교사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단판에 따라 가벼운 학교폭력의 경우 처분사항을 이행하는 조건 하에 경고제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30일 경미한 학교폭력 처리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속려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은 가해학생 조치 정도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진학 ▲9호 퇴학까지 나뉜다. 교육부는 1~3호에 해당하면 교내선도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1~9호 모두 교내 학폭위에서 심의·처분한 뒤 학생부에 기재하기 때문에 법적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교사 대상으로 승사 관련 보형상환이 등장할 정도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에서는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일선 교육청으로 학폭위를 이관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관련 법도 28건이나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피해학생·학부모가 동의하면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제1안건)과 서면사과·접근금지·교내봉사 등 교내선도형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을 전제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제2안건)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국민 여론을 정책속려제로 수렴했다.

정책속려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참여단과 일반 국민 설문조사로 나눠 진행됐다. 참여단에는 중2~고2 학생을 비롯해 학부모 교사 등 구성원 15명과 전문가 15명 등 30명이 참여해 토론했다. 설문조사는 만19세 이상 일반시민 1000명과 학생·학부모·교사 각 400명 등 총 2200명에게 교육부 안에 대한 찬

반과 이유를 묻는 온라인 설문으로 이뤄졌다. 참여단의 경우 두 안건 모두 찬성이 60% 수준으로 우세했다. 그러나 설문조사는 찬반이 팽팽하거나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참여단 역시 찬성 의견이 우세해긴 했지만, 학교폭력을 쉽게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가해자의 진정된 반성을 유도하는 한편, 학교폭력 재발방지 방안도 필요하다고 단서를 붙였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원안을 보완한 형태로 숙려결과를 내놓았다.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폭위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은 올해 준비해 2020년 1학기에 실행하는 게 목표다. 교육지원청에는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이 만들어지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학폭위원 구성도 바뀐다. 기존에는 학부모위원 비중이 과반수였지만 전문성이 낮고 독립된 판단을 하기엔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향후 학폭위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늘리고, 학부모위원은 3분의 1 이상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가벼운 학교폭력은 자체해결제를 적용하되,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벼운 것으로 축소 시도를 한 교직원에는 기중징계하고, 학교폭력을 재발한 가해학생 역시 기중 처분할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별도로 은폐·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5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1단계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는 데 동의해야 하고, 이를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2단계는 전담기구에서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귀된 경우 ▲일회성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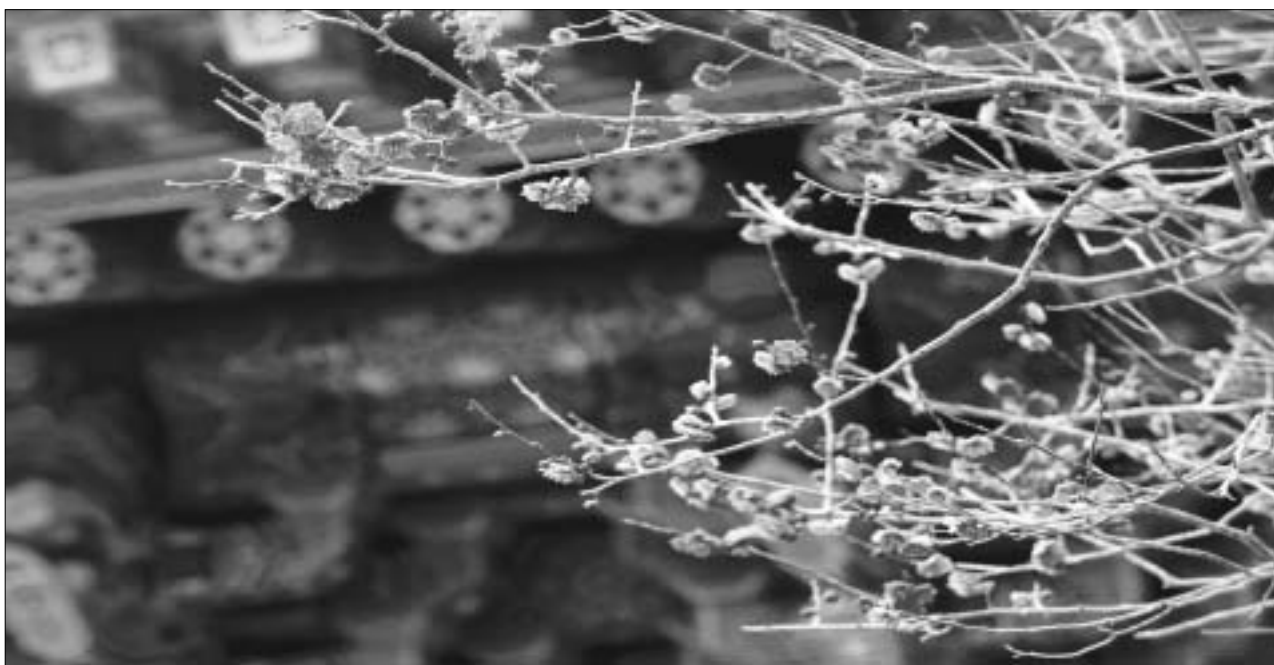
안 ▲보복행위가 아닐 때 등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무조건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할 예정이다. 3단계는 교내 선도와 교육으로 해결할지 여부를 학교장이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학칙상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4·5단계는 종결될 사안이라도 학폭위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했다. 4단계는 교육적 해결이 이뤄졌더라도 그 판단이 잘못된 정보에 따른 동의였거나 새로운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피해자 요청에 따라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 마지막 5단계는 자체해결 완료한 사안은 학폭위와 교육청에 보고하고 향후 은폐·축소 경위가 확인되면 다시 학폭위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학폭위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전에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은 교육감 책임 하에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뉴시스



산사에 찾아온 봄 입춘(立春) 절기를 맞아 앞둔 30일 오후 제주시 오라2동 월정사 앞뜰에 흥매화가 활짝 피어 약동하는 봄 기운을 느끼게 해준다.

서해해경청, 작년 해양오염 사고건수 6%↑·유출량 61%↓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서해청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사고건수는 8% 증가했으나 유출량은 61%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해난에 의한 사고가 35건(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주의(35%), 파손(18%), 고의(9%) 등의 순이었다.

유출된 것을 조사했다. 1㎞미만의 사고는 84건으로 전체 사고건수의 92%를 차지했으며, 30㎞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 오염원별로는 선박에 의한 사고가 77건(85%)이었으며, 그 중 어선에 의한 사고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양오염은 선박통항 및 불법투기 많은 여수해역이 4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북포(28), 완도(12), 군산(8), 부안(3) 등이 뒤를 이었다.

지부티 해안서 이주민선박 2척 전복 5명 사망

아프리카 북동부 아덴만 연안에 위치한 지부티에서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탄 선박 2척이 전복해 최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알지지라 방송 등 현지언론은 이날 지부티 북동쪽 해협인 고도리아 해안에서 선박 2척이 전복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실종됐다고 국제이주기구(IOM)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는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후 이날 오후 조 사탐이 사고 해안가에서 2명의 생존자를 구조했으며, 여성 3명과 남성 2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18살의 한 생존자는 전복된 배 가운데 한 척에는 16명의 여성을 포함해 130명이 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배에는 몇 명이 탑승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부티 해양경비대는 사고 직후 2척의 순찰 보트를 투입해 수색과 구조작업에 들어갔다.

사고가 난 선박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목격자들은 과도한 승선으로 인해 선박이 큰 파도에 부딪히면서 좌초됐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에서는 매년 수천명의 이주민들이 부유한 중동 국가로 건너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부티에서 출발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건너 이라비아 반도로 건너가고 있다.

필리핀서 이슬람 사원 폭발로 2명 사망

필리핀 성당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사흘 만에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에서 수류탄이 폭발해 2명이 사망하고 최소 4명이 다쳤다.

30일 스트레이트타임스 및 현지 매체 래플러 등에 따르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위치한 잠보앙가에 있는 한 모스크에서 이날 자정이 지난 무렵 수류탄이 폭발했다.

이로 인해 이슬람 성직자 2명이 사망하고 최소 4명이 다쳤다. 당시 사원에서는 10명 가량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누군가가 모스크 안에 수류탄을 집어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수류탄 안전핀 하나가 발견됐으며, 인근 폐쇄회로 CCTV에는 용의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CCTV에는 용의자가 자정이 지난 무렵 사원 인근 가로등을 소동한 후 수류탄을 모스크에 던지는 모습이 찍혔다.

이번 모스크 폭발 사고는 21명의 사망자를 낸 필리핀 성당 테러 발생 사흘 만에 발생한 것으로, 보복성 공격이 아슬아슬한 추측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필리핀 남부 홀로 섬의 한 가톨릭 성당에서는 주일 미사 도중 폭탄 테러가 발생해 2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및 필리핀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아부 사야프'는 성당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부 사야프의 소행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성당 인근 CCTV에는 성당 폭발 직후 도주하는 용의자 2명의 모습이 담겼는데, 경찰은 이들을 아부 사야프의 분파인 '이장-이장'의 멤버로 보고 있다. 용의자 2명 중 1명은 지난 29일 경찰과의 추격 끝에 사망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1명과 또 다른 용의자 1명을 쫓고 있다.

이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애완견 산책 금지

오래 전부터 애완견을 기르지 말 것을 권장해온 이란 수도 테헤란 시당국이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영국 BBC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호세인 라히미 테헤란 경찰청장은 "검찰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앞으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히미 청장은 개가 공공장소의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금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라히미는 또 애완견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는 것 역시 앞으로 금지된다며 애완견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처벌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에서는 지난 1979년 이란혁명 이후부터 애완견을 키우고 공원 등에서 산책시키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때때로 애완견을 빼앗기기도 했다.

이란의 이슬람 당국은 개를 "불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애완견을 키우는 것에 대해 축출된 옛 이란 왕정이 도입한 진서방 정책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이란의 문화이슬람지도부는 지난 2010년부터 모든 언론에 애완동물이나 애완동물용 제품에 대한 광고를 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